

## 제주 사회의 미래와 15대 총선

김 석 준

### 1. 제주도 선거사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의문

흔히 제주도의 선거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낙선된다고들 한다. 1948년의 제헌의회의원 선거 이래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까지 직선에 의한 당선자 35명 중 무려 17명이 무소속이라는 사실(뒤의 <표 3> 참조)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여기에 1960년의 도지사 선거와 그후 35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1995년의 도지사 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실 등이 그 증거로 첨부된다. 제주사람들의 이러한 무소속 선호경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무언가 체계적인 해명이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와 특히 집권세력 곧 여당이 제안한 국민투표에서는 친여적 투표성향을 어김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4.3이 진행 중이던 1952년의 2대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이 1971년까지 이어지며,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952년부터 1987년 13대 선거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뒤에 제시한 <표 1> 참조). 게다가 1962년부터 6회에 걸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도 예외없이 전국 평균보다 상위의 투표율을 보이고, 사안에 대한 찬성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한 사례도 세 번이나 있다(뒤의 <표 2>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친여적 투표행태는 앞의 무소속 선호경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혹 선거의 형태에 따라 별개의 의식과 행동, 다시 말해

행위동기와 행위과정의 결정에 질적으로 서로 다른 원리가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도의 차이일 뿐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지만 현상만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인가?

우리는 일단 후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 두기로 한다. 우선 1973년의 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주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양적 비중이 전국에 비할 때 커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당선된 후 여당으로 소속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는 애당초 무소속 출마자가 친여 성향의 속성을 지닌 후보였고, 더 나아가자면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그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 또는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그 점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5년의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자들이 원래는 모두 집권당의 공천을 바랐었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현재의 도지사 역시 그러했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친여적 투표행태’와 ‘무소속 선호경향’간에 긴밀한 상관성이 존재하며 그 상관성을 매개하는 요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문을 푸는 데 긴요하리라 본다. 물론 여기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여당의 당적을 갖게 된 국회의원이나 다시 출마할 경우 전과는 달리 낙선의 고배를 마신 사례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전개와 목적은 첫째, 위와 같은 의문에 해답을 모색해 나가면서 제주지역 선거의 문제를 드러내어 정리·반성해보고, 둘째 그러한 반성에 더해 보다 바람직한 제주사회의 미래를 위한 선거, 특히 다가올 15대 총선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데 둔다.

## 2. 의문에 대해 주어진 해답들

적어도 세 가지 논의가 위에 제기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 하나는 제주사회의 이중적 구조, 제주사람들의 이중적 의식의 결과로 위의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이 때 이중적 구조와 의식이란 전통과 근대, 농촌성과 도시성, 비합리성과 합리성, 온정적 집합주의와 타산적 개인주의 등의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존재’라는 모순적 상태로 묘사된다. 이에 의하면 이 모순된 각각의 짝의 전자의 항목들이 제주사

회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강하며, 그 배경으로 오랜 기간의 고립과 폐쇄를 초래했던 제주지역의 도서성, 그리고 아직도 중요한 산업의 지위에 있는 농업과 비교적 다수의 농촌거주자들의 존재를 든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선거는 연줄중심의 인물본위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대체로 화려한 경력을 지닌 인연있는 무소속에 대한 지지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 주장은 이중구조론이라 부를만 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회의원 선거나 도지사 선거 등에서의 무소속 당선 사례에 대해서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보이는 친여적 성향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듯하다. 더욱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제주지역만이 이중적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두번째의 견해는 정당기피론이다. 많은 조사에 의해 밝혀지듯이 대다수의 제주사람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좋아하는 정당, 일 잘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을 한다. 이는 기성 정치가들에 대한 실망,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정당공천자를 밀어내고 무소속에 대한 차선적·대안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정당들이 제주사회와는 별 연고가 없는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 입장의 견해이다.

특히 기존 정당과 연고가 없는 제주사회라는 지적에서 이 정당기피론은 앞의 이중구조론보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더 잘 꼬집어낸다고 할 수 있다. 무소속 선호경향이 제주사회만큼 두드러진 지역이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친여적 성향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유보적일 수 밖에 없는 견해라 하겠다. 정당을 기피하는 이들이 왜 여당을 지지하는지가 문제라면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째는 개발·보존 갈등론이라 이름지을 수 있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한국사회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60년대 이후 개발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입은 곳이 제주사회라는 데서 실마리를 풀어간다. 그러한 개발이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여당의 지원 덕택이라는 생각을 지역주민 다수가 갖고 있었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 등에서 보이는 친여적 성향을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지

지율이 70년대 이후 차츰 떨어지며 무소속 선호경향도 이 때 부각된다고 여긴다. 그 이유는 개발의 실질적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치권력과 밀착한 일부 외지 대자본과 지역의 특수층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전유했다는 인식이 싹튼 것이 이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은 개발과 그 이익의 환원, 그리고 개발과 삶의 터전인 환경보전의 긴장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정치적으로 그런 의식을 표출한 것이 친여적 무소속 선호 경향이라고 한다.

이 시국은 제주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의 하나를 담아내어 제주사람의 정치참여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우선 흥미를 끈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태도가 개발은 계속하되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오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개발에의 참여를 강하게 원하는 점도 그렇다. 곧 지금의 선거나 투표행태는 집권여당과 그 세력에 대한 정치적 견제로서 이전과는 다른 개발방식의 추구를 겨냥한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입장 역시 설명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그러한 긴장을 경험할 때인 1975년의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왜 전국 1위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1980년의 제5공화국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왜 또 그러했는지? 둘째, 제주지역개발이 태동하고 본격화되기 이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여당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왜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이처럼 남아있는 의문을 보다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어떨까? 멀리 갈 필요없이 해방이후의 사회사 속에서 가능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해방공간의 제주사회는 육지부의 사회변동과 너무 뚜렷이 구별되는 역사적 계기를 품고 있다. 그 역사적 계기에 의해 제주사회의 특수성이 형성되고, 그것이 또한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일상을 한국사회 일반과 다른 양상을 띠도록 영향주었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제주도 선거사의 전개에 일정한 반영물을 침전시켰음은 물론일 것이다. 하지만 그 역사적 계기에 접근하는 일은 우리에게 뼈아픈 비판적 반성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만큼 그 계기는 제주사람들에게 아픈 상처이기 때문이다.

### 3. 비판적 자기 반성을 위한 새로운 해답의 모색

해방공간의 역사적 계기란 아직도 제주사회에 긴장과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4·3의 피비린내 나는 경험을 말한다. 4·3의 실체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채 무수한 정치적 담론들만 논쟁거리로 쌓아두고 있다. 4·3반란, 4·3폭동, 4·3사건, 4·3민중항쟁 등등의 용어들이 그런 논쟁의 혼란스런 화두를 장식한다. 어쩌면 4·3 그 자체가 이러한 논쟁만큼이나 혼란의 복합 그 자체였을 수도 있다.

낮과 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시간들은 당시의 제주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참담하고 질박한 법정이나 다름 바 없었다. 그러나 그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에는 아무런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른 바 ‘산사람’들이 판사로 등장하는 시간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었고, 군경과 이른 바 ‘우익사람’들이 나타나는 시간엔 또한 그들이 법을 정했을 따름이다. 그들은 그렇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무력과 나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제주사람에 대한 그들의 권력을 구성하고 그들의 법이 정당함을 강요해 나갔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은 곧 죽음을 의미했을 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순응하는 것만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러한 순응적 적용이 삶의 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시대였다.

여기에 4·3은 군경과 ‘우익사람’들, 무엇보다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정부 곧 국가기구의 승리로 결말이 난다. 왜도난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국가가, 중앙정부가, 폭력을 겸비한 최고의 권력기구가 4·3의 이수라장을 정리한 존재임이 확인된다. 이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순응적 적용은 확실한 삶의 보장수단이 된 셈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혼돈, 거대한 힘의 억압, 그리고 삶의 위기를 느낄 때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될 전략이 그런 적용방식이 된 것이다.

〈표 1〉의 역대 직선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자. 4·3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던 1952년부터 1971년까지의 선거에서 제주도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그리고 1992년을 예외로한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역시 전국 평균을 넘고 있다. 심지어 4·3으로 투

표가 어려웠던 1952년의 여당 후보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9%가 더 높고, 5·16후 첫 대통령 선거인 1963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23%가 더 많은 전국 1위의 지지율을 보인다. 이것이 제주사회가 이중구조를 지닌 탓인가? 아니면 정당을 기피하기 때문인가? 혹은 제주사람들이 정치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일까? 여기에는 다른 설명 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에 관한 <표 2>를 보자. <표 1>과 마찬가지로 투표율, 찬성률에서 모두 전국 평균을 뛰어 넘고 있다. 그런데 유독 1962년과 1980년의 국민투표 결과가 관심을 끈다. 투표율에서 전국평균과의 차이는 각각 3%, 0.5%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찬성률은 전국 평균과 각각 10.9%, 4.5%의 격차를 보이면서 둘 다 전국 1위를 기록한다. 왜 그런가? 1962년과 1980년의 투표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두 투표는 시간적으로 18년의 거리가 있고, 전자는 4·3이 발생한 후 13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다. 그럼에도 두 투표는 깊은 유사성이 있다.

<표 1> 역대 직선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여당후보 지지율

선거 구분	실시 연도	투표율 *			여당후보 지지율 **		
		제주도	전국	순위	제주도	전국	순위
2대 대선	1952	84.9	88.1	9위	83.8	74.6	4위
3대 대선	1956	95.2	94.4	5위	87.9	70.0	2위
4대 대선	1960	99.6	97.0	1위	99.3	88.7	1위
5대 대선	1963	88.6	85.0	2위	69.9	46.6	1위
6대 대선	1967	85.5	83.6	8위	56.5	51.4	4위
7대 대선	1971	83.2	79.8	4위	56.9	53.2	5위
13대 대선	1987	88.5	89.2	9위	49.8	36.6	4위
14대 대선	1992	80.3	81.9	12위	40.3	42.0	6위

주) \*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여당후보 지지율 = 여당후보득표수 / 유효투표수.

〈표 2〉 국민투표에서의 투표율과 찬성률

실시 회수	투 표 안 건	실시 연도	투 표 율*			찬 성 률**		
			제주도	전국	순위	제주도	전국	순위
1회	제3공화국헌법안	1962	88.6	85.2	3위	91.5	80.6	1위
2회	대통령3선개헌안	1969	84.0	77.1	2위	70.7	67.5	5위
3회	유신헌법안	1972	94.9	91.9	5위	95.2	92.3	3위
4회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1975	90.4	79.8	2위	87.4	74.4	1위
5회	제5공화국헌법안	1980	96.0	95.5	9위	97.4	92.9	1위
6회	제6공화국헌법안	1987	81.4	78.2	8위	94.8	94.5	4위

주) \* 투표율 = 투표자수/투표인수.  
 \*\* 찬성률 = 찬성투표수/유효투표수.

첫째, 두 국민투표를 요구한 세력이 모두 군사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집단이라는 점이다. 무력에 의한 거대한 힘의 보유가 그들의 공통점이다. 둘째, 두 시점 모두 혼란과 그로 인한 비합리적 사회상이 노정됐다가 강력한 폭력을 배경으로 한 집단들이 방법이야 어떻든 그를 정리해나가는 시기라는 점이 또 공통적이다. 이 조건들은 마치 4·3에서의 국가와 군정, 그리고 제주사람의 관계를 떠올리기에 부족하지 않다. 요컨대 4·3에서 체득한 순응적 적응의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가져올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다.

〈표 3〉 역대 직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무소속 후보 지지율

실시 연도 *	투표율(%) **		의원정수 (명)***		무소속후보 비율(%)		무소속지지 율(%)***		무소속당선자의 수 및 구성비(%)			
	제주 평균	전국 평균	제주	전국 (A)	제주 평균	전국 평균	제주 평균	전국 평균	제주 (B)	전국 (C)	B/C	C/A
1948	86.6	95.5	1(3)	200	33.3	44.0	13.9	40.3	1	85	1.2	42.5
1949	.	.	2(3)	200	.	.	.	.	0	.	.	.
1950	?	91.9	3	210	55.6	68.5	52.1	62.9	2	126	1.6	60.0

실시 연도 *	투표율(%) **		의원정수 (명)***		무소속후보 비율(%)		무소속지지 율(%)****		무소속당선자의 수 및 구성비(%)			
	제주 평균	전국 평균	제주	전국 (A)	제주 평균	전국 평균	제주 평균	전국 평균	제주 (B)	전국 (C)	B/C	C/A
1954	77.5	91.1	3	203	76.5	66.0	66.7	47.9	2	67	3.0	33.0
1958	94.9	90.6	3	233	61.5	42.4	52.8	21.7	1	27	3.7	11.6
1960	88.6	84.3	3	233	78.9	64.6	71.6	46.8	1	49	2.0	21.0
1963	81.5	72.1	2	131	0.0	0.0	0.0	0.0	0	0	.	.
1967	77.8	76.1	2	131	0.0	0.0	0.0	0.0	0	0	.	.
1971	78.4	73.2	2	153	0.0	0.0	0.0	0.0	0	0	.	.
1973	75.9	72.9	2	146	62.5	33.9	50.9	18.6	1	19	5.3	13.0
1978	86.2	77.1	2	154	66.7	53.9	67.2	28.1	1	22	4.5	14.3
1981	85.3	78.4	2	184	33.3	16.6	49.5	10.7	2	7	28.6	3.8
1985	88.9	84.6	2	184	33.3	6.6	43.9	3.3	1	4	25.0	2.2
1988	82.6	75.8	3	224	15.4	10.6	27.5	4.8	2	9	22.2	4.0
1992	78.6	71.9	3	237	44.4	21.5	46.0	11.5	3	21	14.3	8.9

주) \* 48년=제헌의회의원 선거, 49년=제헌의회의원 재선거, 50년=2대 국회의원 선거  
 54년=3대 국회의원 선거, 58년=4대 국회의원 선거, 60년=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63년=6대 국회의원 선거, 67년=7대 국회의원 선거, 71년=8대 국회의원 선거  
 73년=9대 국회의원 선거, 78년=10대 국회의원 선거, 81년=11대 국회의원 선거,  
 85년=12대 국회의원 선거, 88년=13대 국회의원 선거, 92년=14대 국회의원 선거.

\*\* 제주도 투표율 전국 시도 중 1위인 연도: 1958, 1963, 1978, 1992.

제주도 투표율 전국 최하위인 연도: 1948, 1954.

\*\*\* 의원정수는 직선대상 국회의원의 수

\*\*\*\* 무소속 후보 지지율 = 무소속 후보에 대한 투표수/ 유효투표수

그렇다면 남아있는 의문 곧 무소속 선호 경향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가? 앞서 말했듯이 이 문제는 위의 대선, 국민투표에서의 경향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끄집어내자면 이는 제주사람들의 냉소적 적응 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냉소적 적응 전략은 순응적 적응과는 달리 외부의 환경 또는 세력에 대한 저항과 반항을 일정하게 함축한다. 그러

나 이 때의 저항은 적응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소극적 저항이며 그런 의미에서 표면화, 현재화하기 어려운 저항과 도전의 담론이 잠재화, 은유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의 유산이 이 전략에도 결부됨은 물론이다. 4·3은 기성 국가기구로 표상되는 강력한 힘에 대한 도전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제주사람들에게 충분하고도 넘치게끔 잘 각인시켜 놓았다. 그후 제주사람들은 국가권력과 그 정책에 대한 집합적 저항이나 도전의 표출이 결국은 더 큰 피해를 스스로 입게 만들리라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 빠진 듯 그런 일에 회피적이고 관망하는 데 익숙해왔다. 적어도 1988년의 탐동불법매립반대운동 이전까지는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5.16이후 6공화국 전기까지의 국가권력의 억압적 성격,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개발 독재적 성격 등이 그러한 자기충족적 예언에서의 탈피를 가로막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은 국가권력이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려해도 적응 전략의 한계속에서 하게 됐고, 그 한계가 집합적·표출적·적극적 저항보다는 은유적·냉소적·소극적 저항의 방식을 택하도록 만들어 나간 것이다.

이러한 냉소적 적응 전략은 순응적 적응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정치상황이 기성화되어 안정적인 상태일 때, 또는 정치권력이 유화적이거나 온정주의적 정책을 쓸 때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선거와 투표에도 반영된다고 본다. <표 1>에서 1967년의 6대 대통령 선거, 1987년과 1992년의 13대, 14대 대통령 선거가 그 사례이며, <표 2>의 1987년 국민투표도 그에 속한다. <표 3>에서 특히 1981년 12대 총선부터 강화된 무소속 선호경향도 이제 그런 전략의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백미는 역시 1981년과 1988년에 시연된다. 무소속 당선자가 여당으로 변신한 데 대한 제주사람의 냉소적 적응 전략이 두드러진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80년대의 선거들에는 개발에 대한 냉소적 적응도 한 몫을 한다. 개발을 원하지만 그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현실, 새로운 개발방식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환경보전을 생각해야 하는 긴장. 이 또한 그런 전략의 다른 형태이거나 최소한 그와 친화력을 갖는 제주사람의 원망 (aspira-

tion)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망이 겹쳐 여당지향의 속성을 가지나 그 간판을 올리지 않는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게 된 것이다.

결국 4·3에 근원을 둔 제주사람들의 삶의 전략 곧 적응의 전략들이 정치상황과 정치지형의 변화, 한국사회의 보편적 사회변동과 제주사회의 특수한 변동과정에 맞물리면서 현재까지의 제주지역 선거사를 구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응적 적응이나 냉소적 적응은 결코 바람직한 삶의 전략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전략의 형성이 제주사회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고난과 좌절, 피흘림과 죽음의 4·3을 겪으면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접어둔다 하더라도 이제는 보다 더 높은 이상과 삶의 전략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연원을 사상할 경우, 보기에 따라 그런 적응 전략들은 여러 가지로 비판될 수도 있거니와 더 이상 4·3의 질곡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사회의 선거만들기

지금 제주사회를 둘러싼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고도 산업화, 국제적으로 세계화를 변동의 축으로 삼고 있다. 정보화는 이런 변동을 가로질러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변동을 촉진하는 요소의 위치에 있으며, 여기에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녹색 욕구는 그런 변동에 또 다른 성격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사회는 이제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의 뿌리내리기, 경제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지속적 개발, 국제적으로 WTO체제하의 농업살리기와 교역증진이 당면한 변동의 과제들이다. 이곳에 환경보전 문제와 밀고 당기는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핵심적 이슈의 하나를 이룬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현단계 한국사회와 제주사회는 과거와의 일정한 단절과 연속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은 간직하여 이어가고 버려야 할 폐해는 과감히 떨쳐버릴 때인 것이다. 그 기준은 물론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발전은 종래의 경제제일주의적 발전이 아님은 자명하다. 삶의 질의 향상,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형성, 환경과 더불어 지키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주사회의 선거만들기는 그렇다면 어떠한가? 우선은 4·3의 질곡에 더 이상 매몰되어선 안될 것이다. 4·3의 피해의식에 얽매인 우리의 일상과 주변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두 번 다시 그 아수라의 4·3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런 자기반성은 꼭 필요한 일이다. 행여 그런 자기반성이 회한의 오열만 자아내서는 안된다. 이는 먼저 과거의 4·3에 고착된 국가와 제주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와 국가의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성찰이어야 한다. 이런 재정립의 과정에서 선거는 중심적 연결점이 되어진다. 민주적 시민의 정치참여로서 선거의 의미를 새로이 주체적으로 부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4·3으로부터 주체적 승화(sublimation)를 함에 다름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선거만들기의 새로운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15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제주사회, 한국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하는 선거만들기의 시금석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강요된 굴종과 순종, 소극적 문제제기와 억눌린 냉소가 아닌 승화된 주체로서, 시민으로서 새로운 선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